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2019. 6. 19.

목 차

I. 문제의 제기

II.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와 소득양극화의 심각성

1.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
2. 소득양극화의 심각성

III. 소득불평등의 원인

1. 자발적인 원인
2. 비자발적인 원인
3. 종합

IV. 소득불평등의 해법

1. 자발적인 원인
2. 비자발적인 원인

V.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VI. 결론

참고문헌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전용덕 대구대 명예교수

I. 문제의 제기

2008년 미국발 경제위기가 전 세계의 주요국으로 전파되자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경제위기의 주범이라는 주장이 대두되었다. 그러나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는 경제성장과 전혀 관련이 없다. '경제이론적으로는' 그렇다.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여 소득재분배를 위한 투쟁을 하거나 정부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한 각종 복지정책을 시행하면 경제성장은 느려진다. 복지정책을 시행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런 복지정책은 자본을 소비케 하여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기 위하여 소위 '사회안전망'¹⁾을 강화하여야 한다면서 여러 가지 대책을 쏟아냈다. 그런 주장의 근거에는 포용(복지)국가 정책이 있다.²⁾ 만약 여당의 복지 정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정책으로 이어지면 경제성장이 지금보다 더 느려질 것은 분명해 보인다. 앞에서 제시한 이유 때문이다.

이 시리즈에서 풀어야 할 의문은 크게 세 가지이다. 첫째,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나쁜가? 소득불평등에 대한 '절대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를 통해 한국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가늠해 본다.

둘째,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점검해 본다. 시장소득이라는 기준에서 소득양극화는 2006~2016년 기간에 악화되었다. 그러나 처분가능소득이라는 기준에서 소득양극화는 같은 기간에 큰 변화가 없었다. 이것은 정부의 정책의 의한 소득평준화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고 있음을 보

1)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은 잘못된 것이다. 사회에 무슨 그렇게 큰 그물이 있는 것이 아니다. 물론 그것은 복지정책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은유적 표현은 복지정책을 확산시키는 데 한 몫을 한다. 사회안전망이라는 개념 대신에 그냥 복지정책 또는 복지제도라는 개념을 쓸 것을 제안한다.

2) 헌법기관인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부의장인 이재민도 중·장기적으로 불평등한 분배 상태를 개선해야 한다고 하면서 향후 바람직한 경제운용 방안의 하나로 중·장기적 증세 방안 마련을 제안했다. 조선일보 2019년 5월 31일자.

여준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된다.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도 동일하다. 2006~2016년 기간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각 분위의 평균소득과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은 낮아졌다. 다만 우리는 그 크기를 실증으로 보여줄 수 없다. 그 길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론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소득양극화를 완화하는 정책을 도입할 것을 주장하는 정치가들, 전문가들 등은 그런 정책이 각 분위의 평균 소득뿐만 아니라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하향하게 만든다는 점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면 소득양극화 문제도 완화될 공산이 크다. 여기서는 소득불평등의 원인들을 분석함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완화할 대책을 마련한다.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들은 자발적인 것과 비자발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지향하는 한국 경제를 위하여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비자발적인 원인들에 초점을 맞추어 소득불평등(그 결과 소득양극화) 해소를 위한 대책을 제안할 것이다.

한 마디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복지정책 또는 복지제도를 시행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복지정책은 오히려 경제성장을 지속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즉 복지정책 또는 복지제도는 경제성장을 더 악화시킬 뿐이다.

한국은행은 매년 노동소득분배율이라는 지표를 발표하고 있다. 노동소득분배율이란 각 연도의 피용자보수를 피용자보수와 영업잉여를 합산한 값으로 나눈 비율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한국은행과 달리, 노동소득분배율을 각 연도의 피용자보수를 전체 국민소득으로 나누어 구한다. 그러나 두 수치를 소득불평등이나 소득양극화를 나타내는 통계로 사용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 오늘날의 노동자(가구주 포함)는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많은 복지정책의 시행으로 공적이전소득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소득분배율 통계는 이 시리즈에서는 사용하지 않는다.

II.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와 소득양극화의 심각성

1. 소득불평등의 국제 비교

소득불평등 정도를 국제적으로 비교해보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OECD가 발표한 2015년 가처분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지니계수(총인구 기준)를 보기로 한다. 가처분소득이란 자신이 창출한 각종 소득에 세금 등을 포함한 공적이전지출을 공제하고 공적이전소득을 합산한 것이다. 지니계수는 0이면 소득 완전 평등을 1이면 완전 불평등을 나타낸다.

2015년 현재 OECD 회원의 지니계수는 다음과 같다.³⁾ 슬로베니아 0.250, 슬로바키아 0.251, 아이슬란드 0.255, 체코 0.258, 핀란드 0.260, 덴마크 0.263, 벨기에 0.268, 노르웨이 0.272, 오스트리아 0.276, 스웨덴 0.278, 네덜란드 0.288, 헝가리 0.288(2014년), 폴란드 0.292, 독일 0.293, 프랑스 0.295, 한국 0.295, 스위스 0.296, 아일랜드 0.297, 룩셈부르크 0.306, 캐나다 0.318, 에스토니아 0.330, 오스트레일리아 0.330(2016년), 이탈리아 0.333, 포르투갈 0.336, 일본 0.339, 그리스 0.340, 스페인 0.345, 뉴질랜드 0.349(2014년), 영국 0.360, 이스라엘 0.360, 미국 0.390, 터키 0.404, 칠레 0.454, 멕시코 0.459(2014년) 등이다.

총 34개국에서 한국은 프랑스와 함께 공동 15위를 차지했다. 물론 이 계수는 세금공제와 공적 이전 후의 결과이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정책 시행 이후의 소득불평등을 보여줄 뿐이다. 각국이 어느 정도 복지정책을 시행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복지정책 시행 이전의 소득불평등 정도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이 계수로는 정부의 복지정책 이후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OECD 국가들 중에서는 중간 정도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선진국으로 불리는 국가들 중에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이탈리아, 일본, 영국, 미국 등의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가 한국보다 더 심하다.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의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한국과 비슷하다. 핀란드, 덴마크, 벨기에,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스웨덴, 네덜란드 등의 국가의 소득불평등 정도는 한국보다 낮다.

2. 소득양극화의 심각성

소득양극화의 심각성을 측정하는 것으로 ‘소득 5분위배율’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소득 5분위배율은 소득 상위 20퍼센트 소득을 소득 하위 20퍼센트의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표 6-1>은 2006~2016년 간의 연도별 소득 5분위배율을 보여준다. 이 배율은

3) 이 지니계수는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2BS05&conn_path=I2에서 인용.

가구당 소득을 기초로 작성한 것이다. 그리고 시장소득에서 사적이전지출을 빼는 것이 정상이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 다른 소득 5분위배율과 비교할 때 조심해야 할 부분이다. 그러나 여기에서는 연도별 소득 5분위배율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다. 모든 연도에서 그 항목이 공통으로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표 6-1> 소득 5분위배율

	소득 구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소득 5분위 배율 (배)	시장 소득 (주2)	6.65	7.09	7.38	7.70	7.74	7.86	7.51	7.59	8.08	8.24	9.32
	처분 가능 소득 (주3)	5.38	5.50	5.71	5.75	5.66	5.73	5.54	5.43	5.41	5.11	5.45

자료: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01&tblId=DT_1L6E001&conn_path=I2에서 인용.

주: 1. 전체가구를 대상으로 함. 전체가구란 전국 1인 가구 및 농어가를 포함한 일반 가구를 포함

2. 시장소득(세전소득)=근로소득+사업소득+재산소득+사적이전소득

3.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이전지출

공적이전소득: 공적연금, 기초연금, 사회수혜금, 세금환급금

공적이전지출: 경상세금, 사회보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2006년 현재 6.65이나 2016년 9.32로 상승하여 그 기간에 소득양극화가 심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론 2012년과 2013년에 그 배율은 다소 하락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 배율은 다시 상승하고 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2006년 현재 5.38이고 2016년 5.45로서 큰 변화가 없다. 소득 5분위배율은 2011년까지는 대체로 상승하다가 2012년부터 다소 하락하여 2016년에 5.45가 되었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최고 5.75(2009년), 최저 5.11(2015년)로서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0.64로 비교적 작은 편이다. 이것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이 2006~2016년 기간의 변동 폭이 크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2006~2016년 기간에 소득양극화가 심화되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소득 5분위배율의 다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시장소득과 처분가능소득을 기초로 한 소득 5분위배율은 2006년에 둘 간의 격차가 1.27배였으나 그 중간 연도에 그 격차가 점차 증가하여 2016년에는 그 격차가 3.87배였다. 이것은 2006년과 비교하여 그 이후 연도에 공적이전지출보다 공적이전소득이 점차 증대하였음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

면, 2006년과 비교하여 그 이후 연도에 정부의 적극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이 시행되었다는 것이다.

그러면 2006~2016년 기간에 소득양극화가 더 나빠지지 않은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 정부의 복지정책으로 잃는 것은 없는가? 정부는 복지정책을 위하여 세금을 인상해야 한다. 세금을 인상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재정적자로 복지정책을 충당할 수 있다. 어느 경우에도 민간이 복지 재원을 마련하기 위하여 저축이나 소비를 줄이지 않을 수 없다. 이것은 자본 소비 또는 저축 형성의 역제로 이어진다. 그것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즉 정부의 복지정책은 국민 전체의 평균 소득을 작아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정부의 복지정책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된다는 것이다. 2006~2016년 기간의 정부의 소득재분배 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 큰 역할을 했지만 각 분위의 평균소득과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은 낮아졌다. 다만 우리는 그 크기를 실증으로 보여줄 수 없다. 그 길은 가보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이론에 의해서만 이해할 수 있다.

III. 소득불평등의 원인

1. 자발적인⁴⁾ 원인

(1) 능력, 증여 또는 상속 그리고 우연

능력, 증여 또는 상속, 우연 등은 소득을 불평등 또는 평등하게 만들기도 한다. 동일한 대학을 졸업한 경우라도 능력이 다른 경우에는 긴 시간이 지난 후에는 소득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도 있다. 증여 또는 상속은 소득을 평등하게도 또는 불평등하게도 만들 수 있다. 만약 평소에 잘 나가던 사람이 사고를 당하는 경우, 복권에 당첨되는 경우, 우연히 자신의 비즈니스를 도와주는 사람을 만나는 경우 등에는 그런 사건과 사고가 소득을 평등 또는 불평등하게 만든다. 앞에서 제시한 모든 경우는 소득을 평등 또는 불평등하게 만들지만 자발적인 것이라는 점에서 문제가 없다.

(2) 기업의 자본 투자

이 시리즈⁵에서 기업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의 원인을 규명했다.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제외하면, 시리즈⁵에서 임금 격차의 원인을 기업의 자본 투자,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자본 투자, 노동조합 등으로 지목했다.

여기에서는 첫 번째 경우를 아주 간략히 보기로 한다. 기업은 노동자의 생산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다. 이 때 투자하는 자본의 양은 기업의 규모에 비례한다. 그러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하다면, 규모가 큰 기업에 취업한 노동자일수록 높은 임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노동자 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중요한 요인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이것은 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런 소득불평등은 정당한 것이다.

(3) 노동자의 자본 투자

노동자는 자신을 위하여 자본을 투자한다. 그 때의 자본 투자는 교육(비공식교육 포함)의 형태로 나타난다. 교육을 많이 받은 노동자, 즉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본을 많이 투자한 노동자일수록 생산성이 높기 때문에 규모가 큰 기업일수록 교육을 많이 받은 노동자를 선호한다. 그러므로 학력에 따른 임금 격차 또는 소득불평등은 당연한 것이다. 다만 정부가 각 학교급의 등록금을 최고가격으로 규제함으로써 학력 인플레이션이 있고 그 결과 여기에서의 실업은 소득불평등을 인위적으로 악화시킨다. 이것

4) 이 절 이후의 ‘모든’ 항목이 자발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능력은 자연적인 것이고, 사고는 우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것으로 ‘자발적’이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표현을 간결하게 위함이었다.

은 정부의 잘못된 가격규제로 인한 것으로 비자발적인 것이다.

(4) 노동자의 한계실물생산

임금 결정의 한 요인은 노동자의 한계실물생산이다. 한계실물생산이란 자본이 일정하다고 할 때 노동 한 단위 추가할 때 증가하는 실물, 즉 판매하는 재화의 양이다. 자본이 일정하다고 할 때 한계실물생산은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노동자의 숙련도는 노동시간에 따라 증가하지만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숙련도는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 즉 노동자가 입사 초기에 숙련도는 빠르게 상승하고 한계실물생산도 그와 비례하여 증가한다. 입사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이 요인은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에 따라 임금 격차를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하지 않는다.

(5) 재화의 가격

노동자의 임금은 재화의 가격에 비례한다. 다만 재화의 가격이 정부에 의해 규제되지 않아야 한다. 현실에서는 가격이 규제되지 않는 재화가 많다. 그러나 화폐가 정부에 의해 통제되고 규제되는 한에 있어서는 사실상 가격 규제가 있는 것과 같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가격규제가 있는 것보다는 영향력이 작거나 영향을 미치는 횟수가 적을 것이다. 가격 규제가 없는 한, 노동자의 임금을 결정하는 재화의 가격은 시장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로서는 재화의 가격은 여건일 뿐만 아니라 정당한 것이다.

(6) 이자율

임금의 결정에는 이자율도 영향을 미친다. 예외를 제외하면, 기업의 크기와 이자율은 반비례 관계가 있다. 즉 기업의 규모가 크고 신용이 좋을수록 자금을 빌릴 때 상대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주게 된다. 기업의 규모가 작고 신용이 좋지 않을수록 자금을 빌릴 때 상대적으로 높은 이자율을 주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이자율 때문에 규모가 작은 기업에 비해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임금은 커질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이자율이 기업 규모 간 임금격차를 만들어낸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자율은 노동자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일종의 '여건'이라는 점이다.

(7) 연공서열제

연공서열제는 일정 시점을 지나면 최저가격으로 작용하여 실업을 양산한다. 그러나 기업이나 공공기관이 자발적으로 연공서열제를 채택하면 연공서열제 채택으로 인한 실업은 우리 스스로가 감당해야 할 몫이다. 그리고 그런 실업에 따른 소득불평등도 역시 그러하다.

2. 비자발적인 원인

(1) 비자발적 실업

실업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실업이 고소득층보다는 저소득층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저소득층은 근로소득이 주 소득이기 때문에 실업의 영향을 크게 받지만 고소득층은 근로소득을 제외하고도 재산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실업의 영향을 저소득층에 비해 적게 받는다.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것이다.

실업자 수가 1퍼센트 올라가면 지니계수는 2016년에는 0.717퍼센트(시장소득 기준)와 0.661퍼센트(가처분소득 기준), 2017년에는 0.940퍼센트(시장소득 기준)와 0.878퍼센트(가처분소득 기준) 상승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⁵⁾ 다만 여기에서 제시한 수치는 추정치임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실업률과 소득불평등을 나타내는 지니계수는 동행성이 뚜렷하다.

실업의 원인에 대한 분석은 이 시리즈¹을 참조할 수 있다. 그 곳에서 필자는 실업의 원인이 여러 가지임을 보였다. 필자는 실업의 원인으로 경기변동, 노동조합, 최저임금,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등을 꼽았다. 실업의 원인들이 어느 정도 실업을 만들어내고 그것이 어느 정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가는 경우에 따라 모두 다르다. 그리고 여기에서 실업의 원인들로 제시된 것은, 연공서열제를 제외하면, 모두 정부의 제도 또는 정부 정책 때문임을 알 수 있다. 그 결과로 그 때의 실업뿐만 아니라, 연공서열제를 제외하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것도 비자발적인 것이다.

(2) 경기변동

경기변동은 워낙 큰 주제이기 때문에 이 곳에서 경기변동이론 전체를 다루는 일은 바람직하지 않다.⁶⁾ 경기변동이 대규모 실업을 초래한다는 것을 이 시리즈¹과 앞에서 지적했다. 이 곳에서는 경기변동이 소득불평등을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악화시키는가를 아주 간략히 다루고자 한다. 여기에서는 이 점만을 다룬다.

사회적 이동이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 중의 주요한 하나일 것이다. 여기에서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그런 사회적 지위 향상 또는 사회적 이동을 억제하게 된다는 점을 보임으로써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궁극적 원인인 경

5) 김준영(2019), 89쪽에서 인용.

6) 경기변동이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Mises(1996), Rothbard(1993), 전용덕(2015) 등을 참조.

기변동을 방지 또는 예방하는 일이 사회적 이동을 쉽게 하기 위한 중요한 한 가지 길임을 보이하고자 한다.⁷⁾

정부가 화폐공급을 증가시켜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하락하게 만들면 경기변동이 발생한다.⁸⁾ 경기변동은 붐과 버스트(위기와 침체 국면을 모두 지칭)로 이루어지고 이때 주식, 부동산 등과 같은 자산시장도 크게 상승했다가 폭락한다. 그리고 붐 시기에는 인플레이션, 버스트 시기에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한다.⁹⁾¹⁰⁾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공통적 특징들 중의 하나는 소득재분배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 때의 소득재분배라는 것은 그 결과가 제로섬(zero-sum)으로서 승자의 이득이 패자의 손해와 같은 것이다. 인플레이션의 경우에 정부와 은행에 의해 창출된 새로운 화폐(new money)를 비교적 일찍 받는 경제주체가 소득재분배의 이득을 보게 된다. 새로운 화폐를 비교적 늦게 받거나 연금 소득자와 같이 소득이 고정된 사람 등은 손해를 본다. Rothbard(1993)는 인플레이션으로 이득을 보는 사람을 '인플레이션 소비자', 인플레이션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을 '인플레이션 지불자'라고 불렀다. 디플레이션의 경우에는 정부의 구제 금융을 받는 경제주체 또는 구조조정 시기에 매우 싼 가격에 매물을 사는 경제주체가 소득재분배의 이득을 보게 된다.¹¹⁾ 구제 금융을 받지 못하거나 저렴한 가격에 자산을 매도 할 수밖에 없는 경제주체와 구조조정으로 인한 해고자 등은 손해를 보게 된다. 소득재분배의 크기는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의 정도와 지속 기간, 새롭게 발행된 화폐의 양, 구제금융의 크기, 임금이 고정된 정도 등에 달려있다. 임금이 고정된 부문이 많으면 그만큼 해고자의 취업이 어려워져서 실업기간이 길어지면서 해고자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에 의한 소득재분배를 통합하고 일반화하면, 중앙은행, 정부, 정부와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는 협력자들(대부분 대기업), 금융부문, 새로운 화폐를

7) 경기변동과 소득불평등의 관계에 대한 이후의 설명은 전용덕(2015), pp. 230~233의 일부를 발췌·수정했다.

8) 2008년 미국에서는 대규모의 경기변동이 발생해서 아직도 진행 중이다. 한국에서는 미국발 경기변동의 영향과 함께 한국 자체에서 발생한 경기변동도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한국발 경기변동은 16만 가구에 이르렀던 미분양 아파트가 주요 증거이다. 한국발 경기변동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전용덕(2015), 2부 “9. 이중고를 겪고 있는 한국 경제”(pp. 240~244)를 참조.

9) 인플레이션의 정도는 정부와 민간은행이 얼마나 많은 지폐와 신용을 창출하느냐에 달려있다. 디플레이션의 정도, 지속기간 등은 정부가 확장적 통화정책을 얼마나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로 시행하느냐에 달려있다. 때에 따라서는 디플레이션을 아주 짧게 거치고 리플레이션(reflation)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러나 전적으로 디플레이션을 거치지 않고 버스트가 진행되지는 않는다.

10)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만 다른 요인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상쇄하기 때문에 현실 자료만을 보면 그런 효과를 관찰할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 대공황이 일어나기 직전 1920년대의 미국이 바로 그런 경우이다. 그 경우에도 인플레이션이 진행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11) 경기변동에 과정에서 발생하는 디플레이션의 경우에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가 인플레이션의 역순으로 이루어지느냐를 두고 라스바드(Rothbard)와 힐스만(Hülsmann)은 견해를 달리한다. 라스바드는 대략적으로 역순으로 이루어진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힐즈만은 그런 과정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Rothbard(1993), Hülsmann(2008) 등을 참조. 필자의 생각으로는 힐스만의 주장이 더 정밀한 것처럼 보인다.

비교적 일찍 받는 사람들 등이 승자이고 그들을 제외한 일반국민은 패자가 된다.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으로 인한 소득재분배는 가난한 사람을 희생으로 부자를 더 부자로 만들게 된다. 다르게 말하면 ‘부익부 빈익빈’(소득양극화)이 되거나 적어도 부자는 더 오래 부자로 머물고 가난한 사람은 더 오래 가난한 사람으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이다. 경기변동이 발생하지 않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익부 빈익빈 현상 또는 사회적 이동성의 저하는 자유시장 또는 온전한 자본주의에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런 현상을 초래하는 중요한 원인은 경기변동이고 제도적 관점에서 경기변동은 정부가 화폐·금융제도를 통제 또는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다.

(3) 노동조합

소득불평등의 70%는 임금불평등에서 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이 시리즈5에서 기업 규모에 따른 임금 격차의 원인을 규명했다. 임금 격차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요인을 제외하면, 시리즈5에서 임금 격차의 원인을 기업의 자본 투자, 노동자의 교육에 대한 자본 투자, 노동조합 등으로 지목했다.

노동조합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길은 두 가지이다. 하나는 노동조합이 실업자를 만듦으로써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그렇게 만들어진 실업자들 중의 일부는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기업에 취직하기 때문에 노동조합이 있는 기업에 취업해 있을 때보다 임금이 낮아지고, 노동조합이 없는 대기업의 임금은 자유시장임금보다 높게 만들기 때문에 노동자들 간의 임금소득의 불평등은 악화된다. 노동조합이 없을 때와 비교하여 그렇다는 것이다. 이런 소득불평등도 비자발적인 것이다.

(4) 최고가격 규제

정부가 재화의 가격을 자유시장가격보다 낮게 고정한 경우, 즉 최고가격으로 고정한 경우를 생각해 보자. 대표적인 예가 민간 버스요금일 것이다. 전기요금, 수도요금, 쓰레기수거요금 등도 최고가격이지만 민간 요금이 아니라는 점에서 버스요금과 다른 점이 있다. 그러므로 공공요금 중에서도 민간 도시버스요금이 우리의 경우에 해당하는 것이다.

고정된 도시버스요금이 민간 버스운수회사 운전사의 임금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본다. 최종 재화인 버스서비스 요금이 최고가격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운전사의 임금은 버스요금만큼 낮게 고정될 수밖에 없다. 버스요금이 자유시장에서 결정될 때보다 운전사의 임금은 그만큼 낮게 된다. 그러나 현실에서 운전사는 최고가격인 버스요

금 때문에 그렇게 낮은 임금을 받을 수는 없다. 그들은 낮은 임금 대신에 장시간 노동을 함으로써 낮은 임금을 보충해왔음을 이번 버스사태에서 알 수 있었다. 운수회사가 주 52시간 근무제를 지키기 위하여 노동시간을 줄이고자 했을 때 그들은 파업을 하고 줄어드는 노동시간으로 인한 소득의 감소를 대신하여 그만큼 임금을 올려줄 것을 요구했다. 그 결과 정부는 버스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운수회사가 직면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영상의 적자는 버스준공영제를 채택하여 세금으로 보충해주기로 했다.¹²⁾

주 52시간 근무제로 버스운수회사 운전사는 임금이 낮아질 수밖에 없었지만 임금을 인상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그 대신 버스요금을 일부 인상하고 버스회사의 경영상의 적자를 세금으로 충당해주기로 했다. 결과적으로 버스운수회사 운전사는 노동시간이 줄어들었지만 임금은 변하지 않았다. 그 대신에 시민들이 세금 부담이나 버스요금의 인상이라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 이것은 주 52시간 근무제로 운전사의 소득은 변하지 않았지만 시민들의 부담은 작지 않게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결국 이것은 소득불평등이 증가한 것으로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버스요금을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소득불평등이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세금의 사용으로 자본이 소비되고 그 결과 그것은 경제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5) 최저임금제

최저임금제는 실업을 만든다는 점을 이 시리즈1에서 지적했다.¹³⁾ 최저임금제에 의한 실업만큼 소득이 불평등해진다. 그러나 일부 노동자는 다른 기업에 취업하고 자유시장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게 된다. 물론 기업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주는 일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실에서 정부가 모든 기업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은 지속된다. 물론 정부에 단속되어 벌금을 물거나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 경우에 실업보다는 소득불평등이 덜 악화되지만 소득불평등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6) 강제성장

경제성장이 정부의 보조금으로 이루어지는 성장을 정상적인 경제성장과 구분하기 위하여 ‘강제성장’(compulsory growth)이라고 한다. 예를 들어, 3공화국 시대에 정부

12) 민간 도시버스요금은 오랜 기간 동안 최고가격으로 규제되었다. 그 결과 민간 도시버스운수회사는 점차 사회주의화되어왔다. 이것은 간접주의가 장시간 지속되면 사회주의화된다는 경제이론적 지혜가 옳음을 보여주는 좋은 증거이다. 민간 도시버스의 첫 번째 사회주의화는 액화천연가스버스의 구입을 지자체가 세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을 때였다. 이 번 경우는 사회주의화를 향한 두 번째 조치라고 하겠다. 이제 도시버스운수회사는 명목상은 민간 소유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민간 소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겠다.

13) 한국노동연구원과 중소기업연구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토론회에선 최저임금 10% 인상되면 노동시장 전체의 고용 규모가 0.65~0.79% 정도 감소할 것이라고 했다. 그 대상은 주로 청년, 노인,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 등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조선일보 2019년 5월 31일 자 사설.

는 수출기업의 수출 실적에 따라 자유시장금리보다 매우 낮은 수출지원금융금리로 대출을 해주었다.¹⁴⁾ 수출지원금융금리는 정부가 고정한 금리일 뿐만 아니라 정부가 고정한 다른 금리보다도 매우 낮았다. 물론 두 금리 모두 자유시장금리보다 매우 낮았다. 이것은 정부가 자유시장금리와 수출지원금융금리의 차이만큼 수출 기업에게 보조금을 준 것을 의미한다. 이 때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에 의해 경제성장이 일어나지만 정상적인 의미의 경제성장은 아니다.

정상적인 의미의 경제성장과 강제성장의 차이는 이것이다. 정부가 보조금을 지불할 때 성장은 일어나지만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기업이나 기업가는 그 보조금만큼 좋아지고 그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세금을 낸 일반 사람이나 수출을 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하는 기업은 자신이 낸 세금만큼 후생도 소득도 모두 후퇴한다. 즉 강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발생하게 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는 것이다. 그리고 강제성장에 의한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보조금의 크기에 달려 있고, 소득불평등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가는 보조금의 지속 여부 등에 달려 있다. 그러나 이것은 쉽게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는 3공화국 시대가 보조금이 많았고 그 이후에는 강제성장을 위한 보조금은 축소되고 소비를 위한 보조금, 즉 복지정책이 증대되어 왔다.

3. 종합

자발적인 원인들에 의한 소득불평등과 비자발적 원인들에 의한 소득불평등이 모두 합산된 결과가 <표 6-1>에서 시장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 5분위배율이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과 비자발적 원인들을 실증 분석하는 일은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자발적 원인들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정당한 것이기 때문에 결코 문제 삼으면 안 된다.

<표 6-1>에서 처분가능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 5분위배율은 시장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 5분위배율에 공적이전소득을 더하고 공적이전지출을 뺀 것이다. 처분가능소득을 기초로 계산한 소득 5분위배율은 정부의 복지정책이 반영된 것이다. 표는 2006~2016년 기간에 정부의 복지정책이 소득양극화를 강력하게 완화해왔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2016년으로 올수록 복지정책의 효과는 더 컸다고 하겠다. 그러나 정부의 복지정책은 소득양극화를 개선하는 데는 도움이 되었지만 각 소득 계층의 평균 소득은 하향 평준화되었다. 국민 전체의 평균소득도 동일하다.

14) 이 점에 대해서는 전용덕(2019), 29장, 32장, 35장 등을 참조.

IV. 소득불평등의 해법

1. 자발적인 원인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자발적 원인들은 자발적이기 때문에 정당한 것이다. 다만 재산소득이 있는 경우에 그 재산의 소유권이 정당한 것이라야 함은 물론이다. 그리고 바로 그 이유로 그 때의 소득불평등을 개선하고자 하는 시도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경제이론은 자발적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정도가 어느 정도가 될 것인가를 가르쳐주지 않는다. 이 점에서 소득불평등의 정도(그에 따라 소득 양극화의 정도)에 대한 어떤 판단도 궁극적으로는 판단자 자신의 임의성이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발적 원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불평등 정도는 당시의 경제 환경 뿐 아니라 역사적 배경 등에 의해서도 결정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원인들에 의한 소득불평등을 위한 해법을 제시한다. 첫째, 증여 또는 상속과 관련하여 세금을 인하하는 것이다. 그런 세금 인하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킬 수 있지만 세금 인하로 전체로서 민간이 재산을 더 많이 보유한다는 점에서 좋은 것이다. 이 경우에 소득불평등이 조금 악화되더라도 세금 인하로 인한 재산의 증가가 민간에게 더 유리하기 때문이다.

둘째, 기업의 자본 투자는 노동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노동자의 임금을 올라가게 만든다. 그러나 자본 투자에 의한 임금 인상이 소득불평등을 개선한다고 확정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개별 기업마다 투자의 크기가 다를 뿐만 아니라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자본 투자가 크기 때문이다. 자본 투자로 소득불평등이 악화되더라도 노동자의 생산성을 끌어올려 임금을 올라가게 만든다는 점에서 자본 투자를 적극적으로 촉진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자본 투자에 대해 세금을 할인해주는 방법이 자본 투자를 유도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셋째, 노동자가 자신을 위하여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한 것이다. 그러나 현행 최고가격 제도 때문에 그런 투자는 과잉되어 낭비되는 경우가 많다. 교육에서 각 학교급 등록금의 최고가격 제도를 철폐할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해야만 교육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없을 것이다. 교육에서 낭비되는 자원이 줄어들면 기업 차원에서 자본 투자가 증대할 것이다. 그것은 다시 노동자의 임금을 평균적으로 올라가게 만들 것이다.

넷째, 개인이나 기업이 자발적으로 연공서열제를 채택하는 것을 막을 방법은 없다. 그러나 그 제도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제도임을 정부가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다섯째, 정부의 화폐 발행이 재화의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차단하는 것이다.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여섯째, 중앙은행이 이자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것을 중지해야 한다. 이자율을 시장 이자율 낮게 고정하면 자금의 배분이 비효율적이 된다. 그 때 중소기업에 비해 대기업이 자금 배분에 있어서 유리하게 된다. 이런 환경은 중소기업이 조달 가능한 자금을 줄어들게 만들어 자금 조달 이자율을 자유시장 이자율보다 높게 만든다. 이것은 부익부 빈익빈을 초래하는 한 가지 방법이다.

2. 비자발적인 원인

이 시리즈 1에서 필자는 실업의 원인으로 경기변동, 노동조합, 최저임금,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등을 꼽았다.

경기변동은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을 통해 사회적 이동을 억제하거나 사회적 이동에 제동을 건다. 그리고 이 때 소득은 불평등 또는 양극화된다. 경기변동을 예방하는 길은 현재의 화폐·금융제도를 자유시장에 맞게 개혁하는 일이다.¹⁵⁾¹⁶⁾ 그러나 이 점에 대해서는 다른 곳에서 따로 다루고자 한다.

노동조합, 최저임금, 연공서열제, 실업보험, 각종 최고가격(이자율 규제 포함) 등은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것들은 자원 배분을 왜곡시킬 뿐 아니라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정부 보조금이 대기업에게 대부분 지원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그런 정부 보조금이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 등에게 지원되고 있다. 정부 보조금에 의한 성장은 강제성장으로서는 소득을 불평등하게 만들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행한 것은 그 점을 이해하고 있는 정치가들, 관료들, 경제전문가들 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15) 화폐·금융 시장이 자유시장이 되더라도 경기변동(business fluctuations)은 언제나 일어날 것이다. 경기변동과 경기변화의 차이에 대해서는 Rothbard(1993), 전용덕(2015) 등을 참조.

16) 화폐·금융제도 개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Rothbard(1993), 전용덕(2015) 등을 참조.

V.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관계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의 간의 이론적 관계는 무엇인가? 결론부터 말하면,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은 아무런 이론적 관계가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이 시리즈3에서 설명했듯이, 자본의 증가만이 경제성장을 초래한다. 국내 자본만을 고려하면, 자본의 크기는 저축에 의해 결정된다. 그리고 그 저축은 각 개인의 시간선호에 의해 결정된다. 소득이 낮은 사람도 미래 지향적인 시간선호를 가진 사람은 저축률이 높을 것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도 현재 지향적인 사람은 저축을 적게 할 것이다. 대표적인 예가 1950년대 농민을 들 수 있다. 당시 대부분의 농민은 경제적으로 어려웠지만 자식을 학교에 보내기 위하여 빚을 내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것은 비록 소득이 낮았지만 당시의 농민이 미래 지향적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 마디로, 미래 지향적인 시간선호를 가진 사람이 많을수록 저축률이 높고 그런 높은 저축에 의해 만들어진 많은 자본은 고속성장을 초래한다.

소득불평등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일단 자유시장이라고 가정한다. 이 때 자유시장이란 치안, 국방, 그것들을 위한 사법 체계의 유지 등을 정부가 맡고 그 이외 일체의 것은 시장에서 생산자들과 소비자들 사이에서 자유롭게 거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물론 이 때 정부는 치안, 국방, 사법 체계의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 최소한의 비용을 세금으로 징수한다. 자유시장일 때 생산자는 노동자를 자유롭게 고용하고 임금도 두 경제주체의 합의에 의해 결정한다. 생산자는 최대한 낮은 임금을 지불하기를 원하고, 노동자는 최대한 높은 임금을 받고자 한다. 현실의 실제 임금은 두 가지 임금의 중간에서 결정된다. 그리고 그 임금은 필연적으로 기업규모에 따라 임금 격차가 생겨날 것이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투입 자본의 크기가 다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임금에 의한 불평등이 소득불평등의 가장 중요한 요인이다. 그러나 이 때의 소득불평등이 어느 정도인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에 관한 경제이론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때가 최선의 상태라는 점이다.

소득불평등과 경제성장 간의 실증적 관계는 어떤가? 한국 경제사의 실증적 관계를 보기로 한다.¹⁷⁾ 1963~1976년 기간에 평균 경제성장률은 높았지만 소득불평등도 높아졌다. 1인당 GDP가 1퍼센트 상승함에 따라 지니계수는 평균적으로 0.023 올라갔다. 이 시기는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이 동반 상승했다. 그것은 이 시기에 소득불평등을 초래하는 비자발적 원인들이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음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그 기간 소득불평등을 초래했던 비자발적 원인들을 전부 검토할 수는 없다. 직관에 의하면, 이 시기에 강제성장은 작지 않았다. 앞에서 보았듯이, 강제성장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다. 각 연도별로 강제성장의 비중이 얼마나 큰가는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1972년 전후한 대규모 경기변동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다. 이 기간에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17) 이 부분에 대해서는 김준영(2019), 7장을 참조.

원인들은 여러 가지이다. 그런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할 때, 작지 않은 규모의 강제성장과 1972년 전후한 대규모 경기변동 등은 소득불평등을 지속적으로 악화시켰다.

그 다음 기간은 1977~1994년 기간이다. 이 기간에 경제성장률이 그 이전만큼 높지는 않았지만 여전히 경제성장은 지속되었다. 다만 1980년과 1998년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 그러나 1977~1994년 기간에 소득불평등은 지속적으로 완화되었다. 1인당 GDP가 1994년에 1만 달러 수준으로 상승하고 지니계수는 1977년에 0.341에서 1994년에 0.301로 약 12% 낮아졌다. 이 기간에도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킨 원인들은 여러 가지이다. 그리고 그것은 실증 분석의 문제이다. 다른 요인들이 일정하다고 할 때, 1963~1976년 기간에 비하여 1977~1994년 기간에 강제성장의 비중은 낮아졌다. 이것은 소득불평등을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만들었다. 그러나 1979년 전후한 대규모 경기변동은 소득불평등을 악화시켰다. 결과적으로는,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할 때, 1977~1994년 기간에 경기변동보다는 지속적으로 낮아진 강제성장이 소득불평등에 미친 영향이 더 컸다고 추정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경제성장은 느려졌고 소득불평등은 1994년을 변곡점으로 상승했다. 이 기간은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의 악순환기라고 할 수 있다. 1995년 이후 강제성장은 그 이전과 비교하여 크게 사라졌지만 두 번의 경제위기(즉, 1997년 전후의 경제위기, 2008년 전후의 경제위기)는 소득불평등을 크게 악화시켰다.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면 말이다.

VI. 결론

경제성장과 소득불평등 간에는 일관된 관계가 없다는 것이 1963년 이후의 한국 실증 자료가 보여준다. 그러므로 로렌스 서머스 교수가 “세계 경제의 장기침체와 저성장의 주된 요인이 소득불평등”에 있다는 지적은 이론뿐만 아니라 실증에서도 뒷받침되지 못한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이 점은 한국경제에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가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라는 주장은 이론적 근거가 없는 것이다. 복지정책을 확대하기 위하여 그런 주장을 하는 것은 정치인들이 국민을 속이는 것이다. 여기에 그런 주장을 지지하는 경제전문가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를 하는 것이다.

경제적으로 완전한 평등은 실현 불가능하다. 인간의 능력, 행운, 사고, 증여 또는 상속 등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완전한 평등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이상이 아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의 능력을 평등하게 만들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는 발상은 매우 위험하다. 그리고 그런 목표를 세워서 경제적 평등을 강력하게 실행하더라도 분배할 재화가 점차 사라지는 사태에 직면할 것이다. 경제적 평등을 강력하게 추구하면 열심히 일할 경제적 동기가 없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소득평등이 최선인가? 질문을 다르게 하면, 어느 정도의 소득불평등을 허용해야 하는가? 다수의 전문가들은 막연히 현재의 소득불평등 상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로 소득불평등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도 바람직한 소득불평등 상태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는다. 앞에서 보았듯이, 자발적 원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다. 소득불평등의 원인이 자발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비자발적 원인에 의한 소득불평등은 허용되어서는 안 된다. 그 원인이 비자발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소득불평등 또는 소득양극화를 완화하고자 하는 어떤 정부 정책도 전체 국민의 평균 소득을 낮춘다는 문제점이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우리 사회에서 남녀 간 임금 격차는 결코 작지 않다. 그런 격차는 모든 규모의 기업에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 남녀 간 임금 격차가 성차별, 생산성 차이, 성차별과 생산성 차이의 혼합 등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주제는 추후에 정밀한 실증 분석이 필요하다. 비정규직과 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작지 않다. 비정규직은 ‘자발적인 것’도 있고 ‘비자발적인 것’도 있다. 정규직과 비자발적인 비정규직만을 대상으로 한 임금 격차를 실증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그런 실증 분석은 다음 기회로 미루고자 한다.

참고문헌

- 김준영, 『한국경제, 대전환의 기회』, 매일경제신문사, 2019.
- 전용덕, 『국가주의 시대의 경제와 사회: 미군정에서 3공화국까지』, 도서출판 해남, 2019.
- 전용덕, 『경기변동이론과 응용』, 마인드맵, 2015.
- Hülsmann, Jorg Guido, “Deflation and Liberty”, Ludwig von Mises Institute, 2008.
- Mises, Ludwig von, *Human Action*, Fox & Wilkes, 1996.
- Rothbard, Murray, *Man, Economy, and State*, The Mises Institute, 1993.

<한국경제의 진단과 처방> 시리즈 6

소득불평등과 소득양극화, 그리고 경제성장: 문제, 원인 그리고 해법

저자_ 전용덕

발행자_ 최승노

발행처_ 자유기업원

발행일_ 2019년 6월 19일

주소_ 서울시 강서구 강서로 173 (화곡동, 터보빌딩)

전화_ 02-3774-5000

홈페이지_ www.cfe.org

※이 원고의 인용과 발췌는 저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